

【일반논문】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남북 간의 합의 또는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다. 이 논문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사건은 안보불안을 15~20%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과는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공동행사와 협력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그와 비슷한 폭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사건효과는 또한 세대와 이념, 지역 안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 동안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대와 이념, 지역 간 통일의식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도 진행되었다. 남북관계 사건이 안보불안의식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통일자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안보불안의식과는 달리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 통일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제어: 사건효과, 안보불안, 통일의식, 남북관계 사건, 북한도발사건, 남북협력사건.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RF-2010-361-A000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남북관계와 사건효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통일의식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통일의식은 많이 변화해 왔다. 통일을 원하느냐, 아니면 분리주의를 선호하느냐 하는 통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고, 남북관계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10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처럼 변화하는 통일의식 가운데는 그 기저에 변하지 않는 심층의식이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표층의식이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의식 중에도 한 방향으로 꾸준한 변화를 보이는 의식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통일의식의 변화는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안함·연평도 폭격이나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남한의 대북 인식과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남한의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남북 간의 합의 또는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사건을 접하면서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미지를 습득하게 된다. 남북관계 혹은 남북한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회구성원들의 통일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지난 10년 간 발생한 북한 및 남북관계 사건은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사건이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주제를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건 전후

의 통일의식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사건이 미친 영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해보려 한다.

본 글이 독립변수로 다루는 '사건'(event)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대남 구두 위협 등 북한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북한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공동행사와 같이 남북협력 사건이다. 종속변수로 분석할 통일의식(unification attitude)은 통일, 북한, 안보, 대북정책 등에 관한 포괄적 인식을 의미¹⁾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북인식과 안보의식으로 한정하였으며 통일인식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관계의 사건이 안보의식과 대북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그 강도와 특징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의식 조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7월 중 한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007년 이전의 자료는 통일연구원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비연례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II. 북한발 사건효과

: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금강산, 구두위협

1. 핵실험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핵실험

1) 김병로·김병조·박명규 외, 『2007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pp. 4~5.

험을 감행해 왔다. 2002년 10월 미국의 북핵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4년 동안 핵개발을 추진한 후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9년에는 4월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를 삼자 5월에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3년 2월에도 역시 이전 해에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2012.12)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하여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016년 1월에는 4차 핵실험을, 같은 해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각각 감행하였다. 2016년 조사 이후에 단행된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은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네 번의 북한 핵실험이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즉 안보불안 의식에 집중해 살펴보기로 하자.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에 미친 효과는 2007년 7월 조사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대 조사가 2007년부터 시작한 것이라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통일연구원의 2005년 6~7월 조사를 사용했다. 2005년 조사에서 “귀하는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3%였는데, 2007년 7월의 조사에서 59.7%로 꺾충 뛰었다. 그 사이에 핵실험 이외의 다른 큰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의를 16.7% 상승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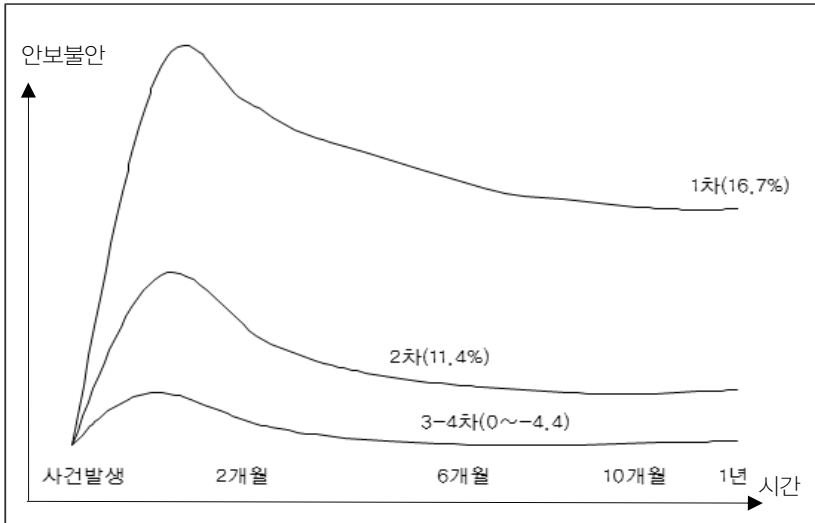
2009년 5월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영향은 어떻게?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2008년 조사에서 52.2%였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2009년 2차 핵실험으로 63.6%로 높아졌다. 11.4%가 상승한 것이다. 단순한 수치로만 본다면 2차 핵실험이 안보불안에 미친 효과는 11.4%다. 1차 핵실험 효과보다는 5%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거듭 언급하지만 11.4%라는 2차 핵실험 효과는 엄격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설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안보 불안에 미치는 사건과 요인들이 너무 많고 핵실험 시점과 조사시점 간의 시차도 존재하여 핵실험의 효과를 전후 조사결과의 차이로 단순화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16.7%, 11.4%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효과는 북한 핵보유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인식에도 비슷하게 반영되어 나타났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을 전후로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54.9%→68.2%로 13.3%가 상승하였다. 또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전후로 2008년과 2009년 7월 사이에 북핵위협의식은 61.3%→74.3%로 역시 13.0% 상승하였다. 즉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은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위협'의식을 동일하게 13.0%씩 고조시킨 것이다.

그러나 2013년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 2차 핵실험과 비교할 때 안보불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사이 안보불안은 68.9%→66%로 오히려 낮아졌고, 북핵위협 의식도 80.4%→78.4%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4차 핵실험에도 적용되었다. 즉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보불안은 70.5%(15년)→66.1%(16년)로 오히려 낮아졌다. 짐작컨대 핵실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남한주민들은 어떤 실제적 위협을 느끼지 못했고 그 결과 안보불안에 미치는 효과도 오히려 역현상이 나타났다. 3차, 4차 핵실험은 무력도발이나 핵보유 등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 의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북한의 1~4차 핵실험이 안보불안에 미친 효과



이러한 설명은 단지 추론에 불과하며 통계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에 학습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대략의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핵실험에서는 핵실험 이후 10개월 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16.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 2차 핵실험 효과처럼 사건직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조사했다면 16.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1차 핵실험이 단기간(1~2개월) 내에 안보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16.7%보다 컸을 것이며 20%를 충분히 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2차 핵실험 효과는 핵실험 단행 후 2개월 만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11.4%라는 수치는 핵실험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 2월 12일 핵실험 효과는 2차 때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러한 예상은 적중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5개월이 지난 7월의 조사를 보면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안보불안과 북핵 위협 의식이 오히려 낮아졌다. 안보불안은 68.9%→66.0%로 낮아졌고 북핵위협 의식도 80.4%→78.4%로 낮아졌다. 이전 두 차례의 핵실험 사건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위험이 아니라는 학습효과가 생겨났고 5개월이라는 시차도 있어서인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나 핵위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차 핵실험의 효과는 대단히 커서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6.7%의 안보불안이 증가한 반면, 2차 핵실험에서는 단기간 내에 11.4%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3차 핵실험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예상 역시 적중하였다. 2016년 7월 조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이 전년과 비교하여 70.5%→66.1%로 4.4%p 오히려 낮아졌다. 3차 핵실험 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북한핵에 대한 위협의식도 84.0%→79.5%로 낮아졌다.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북핵에 대한 위협의식은 높아지지 않은 것이다. 1차 핵실험은 단기적으로 20% 혹은 중기적으로 16.7%의 안보불안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며, 2차 핵실험은 11.4%의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는 동안 일종의 학습효과가 나타나 3차 핵실험부터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실험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천안함·연평도 사건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남한의 구축함이 피격, 침몰되어 46명의 장병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었다. 이전에도 서해교전으

로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장병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충돌이 우발성이 강한 사건이었다면 천안함 사건은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그만큼 천안함 사건은 피해의 규모에서 보거나 도발의 성격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의식에 미친 결과는 미미하였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안보불안은 63.6%에서 67.3%으로 3.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북핵의 위협의식은 74.3%에서 73.8%로 오히려 낮아졌다.

천안함 사건의 효과가 이처럼 낮게 나타난 이유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해석과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한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야기됨으로써 사건자체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초동대처 미숙과 정보공개 거부 등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32.5%인데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8%, '반반'이라는 응답이 31.7%로 국민들의 1/3만이 신뢰를 보내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여론의 결과가 2010년 6·2지방선거에 반영되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당이 천안함 사건을 '북풍'에 이용하려고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었다. 북한의 조직적, 의도적 도발이라는 초유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림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 자체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기보다는 사건의 효과가 발생했으나 정부조사의 불신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효과의 폭과 변화의 사이클을 개괄적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즉 천안함과 같은 예상외의 사건이 발생하여

10%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수 있으나, 조사과정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신 등 정치적 요인 때문에 5~6% 가량 빠져 결과적으로 3.7%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친 효과는 예상보다 적었다.

반면, 연평도 사건의 파급효과는 대단히 컸다.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발 무력도발 불안의식은 67.3% → 78.3%로 11.0%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천안함 사건이 3.7% 효과를 가져온 데 비하면 연평도 사건의 효과는 상당히 컸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이 이미 67.3%라는 역대 최고 수위로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1.0%를 끌어올린 것은 연평도 사건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받았는가를 보여준다.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연평도 사건은 북한에 의한 공격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6·25전쟁 이후 최초로 남한의 영토를 공격하여 민간인을 사상시키고 민가를 파괴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잠재된 불안의식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북핵위협도 천안함 사건으로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연평도 사건으로는 73.8% → 80.7%로 6.9% 포인트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은 사건 자체는 46명의 군인이 희생되는 심각한 사건이었으나 정부조사의 불신이 개입함으로써 남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연평도 사건은 북한에 의한 물리적 공격이 명확한 만큼 남한의 안보를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과거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과 비교하면 사건이 반복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됨을 발견하게 된다. 남북 간에 발생한 무력도발 중 근래에 발생한 첫 사건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일 것이다. 불행히도 이 서해교전의 사건효과를 비교할만한 자료는 마땅치 않아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2002년 6월 발생한 서해교전 사건을 보면, 당시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안보불안

의식이 44.2%(1999년) → 60.4%(2003년)로 16.2% 포인트나 급상승하였다. 이는 당시 서해교전 사건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에 조성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비하면 안보불안을 11.0% 상승시킨 2010년의 연평도 사건은 서해교전보다는 그 효과가 강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북한발 핵실험이 초래한 효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사건도 초기에는 남한의 통일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반면 사건이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는 경향을 보인다.

3. 금강산관광객 피살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남한관광객 피격사건도 남한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2008년 조사에 나타난 결과만을 보면,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의식은 59.7%에서 52.2%로 낮아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직후 59.7%에 달하던 안보불안 의식은 2007년 9월 초에 이미 48%로 떨어진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48% → 52.2%로 4.2% 상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여 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광객을 억류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물리는 등 크고 작은 다툼과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피격당하는 일은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의 잘잘못을 두고 남북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 갖는 새로운 측면은 주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와 닿는 관광이라는 요소 때문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군사적 문제인데 비해 관광객 피격은 대면접촉이 일어나는 주민들의 일상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의식을 더 생생하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연평도 사건이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을 상승시켰음에도 통일자체에 대한 태도를 악화시키지는 않았으나,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은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평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안보불안이 증대함에 따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오히려 24.1% → 27.3%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은 남한주민의 ‘통일필요성’ 의식을 63.8%에서 51.6%로 무려 12.2%를 끌어내렸다. 관광객 피격 사건은 다른 무력충돌 사건과는 달리 시민과 일반대중이 관광이라는 주민 생활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통일외식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금강산 사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4.7% 감소하였고, 사회문화 교류나 남북회담, 인도적 지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각각 9.8%, 10.4%, 5.6%씩 감소함으로써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대북정책과 통일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결정적으로 확대시켰다.

요컨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4.2% 증가시키고 동시에 통일외지와 대북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를 10% 가량 하락시켰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천안함·연평도 폭격 등 국가적 수준의 군사적 사건과는 달리 금강산 사건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같은 심각한 안보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에 대한 태도와 대북정책에 대해 심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광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피격사건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통일외식과 구체적인 대북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북한의 대남위협 발언

북한의 대남 위협발언은 국민들의 통일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1994년 북한의 ‘서울불바다’ 발언으로 남한 전체가 발칵 뒤집힌 적

이 있다. 1994년 3월 19일 남북특사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발언에 이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거론하자 당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서울 불바다’ 발언을 직접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전까지 북한의 방송을 남한국민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선전포고하는 발언을 TV로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1994년 ‘서울불바다’와 관련한 자료는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1993년 6월의 자료와 1995년 12월 자료를 비교하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7.7% → 54.8%로 7.7% 포인트 상승하였다.²⁾ 2년 사이에 김일성주석 사망(1994.7)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불안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북한의 ‘서울불바다’ 위협은 남한주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당시 언론은 일제히 ‘서울 불바다’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고 국민들은 당장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헝싸여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소동이 벌어질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러한 위기감은 1994년 6월 전쟁위기설로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구두위협’에 의한 남한국민들의 안보불안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북한의 대남위협발언은 대북태도와 의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구두위협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2010년 1월 15일 ‘보복성전’을 거행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과 2010

2)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35쪽;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17쪽.

년 1월 24일 “남한의 선제타격론을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 발언은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을 크게 흔들여 놓지 못했으며 대북인식에 약간의 부정적 각인 효과가 있었으나 미미한 정도였다.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은 34.9%→34.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 2월에도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과 독수리연습 훈련을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숴버리는 서울불바다 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으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대북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와는 달리 북한의 위협발언은 안보불안 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단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약간의 작용을 하였을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2012년의 사례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구두위협이 공개화되면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의식이 오히려 높아졌다. 2012년 4월 북한은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 그 방법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방식으로 모든 도발 근원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하겠다”고 밝혔고, 2012년 6월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KBS, CBS, MBC, SBS 방송국 좌표도 확정해놓은 상태라고 전하며 '조준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구두위협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조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위기의식은 78.3%→68.9%로 9.4% 포인트 낮아졌고,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는 의식은 34.3%→39.3%로 높아졌다. 이러한 구두위협에 대해 학습효과가 생겨난 데다 그러한 위협발언이 실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정세판단 능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긴장이 고조될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현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Ⅲ. 남북협력 사건효과: 정상회담, 공동행사

1. 남북정상회담

남북한 간 처음으로 개최된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의 안보불안 상쇄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지만 분석할 자료가 마땅치 않다. 1차 정상회담 이전인 1999년 12월 그 이전 해에 시작된 금강산관광과 남북교류 정책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이미 57.7% → 44.2%로 낮아진 상태였다. 이처럼 낮아진 국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수치로 정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1차 정상회담의 파급력은 2002년 12월 대선으로 그 영향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시기인 1998년에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발견(6. 23)되고 광명성 1호 장거리 로켓 발사(8. 31),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11월) 등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의식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수언론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강하였으나 정상회담 이후에는 보수언론 조차도 논조를 중간지지 쪽으로 옮기는 변화가 일어났다. 즉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1차 정상회담 이전에 각각 중간지지, 중간비판, 보수적 정책비판의 입장을 취하다가 정상회담 이후 모두 중간지지로 옮기게 된 것이다.³⁾ 대북 포용정책이 많은 시비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3) 김재홍,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논조와 국민여론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2003년 여름), p. 206, 215. 이런 중간지지 입장은 언론사 세부조사가 시작되면서 중간비판(중앙), 보수적 정책비판(동아, 조선)으로 돌아섰다.

를 받은 데다 남북한의 공동선언과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1차 정상회담의 효과는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2차 정상회담(2007. 10)은 전후로 여러 사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2007년과 2008년 사이 안보불안의식은 59.7% → 52.2%로 7.5% 포인트 낮아졌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대로 조사 직전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2차 정상회담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차 정상회담 효과는 7.5%보다 더 높았을 것은 확실하다.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2007년 9월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인 2007년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위기의식이 59.7%로 매우 높았다. 그런데 8월 초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말에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북한의 홍수피해 때문에 정상회담이 10월로 연기된 상태에서 중앙일보가 9월 초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59.7% → 48.0%로 11.7% 포인트가 떨어졌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이 발표한 정상회담의 효과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형성함으로써 안보불안감을 11.7% 끌어내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사건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2차 정상회담 효과가 11.7%로 나타났다면 1차 정상회담의 효과는 이보다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튼 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의 대형 사건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통일의식을 10% 이상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남북 공동행사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스포츠 행사나 이산가족상봉사업 등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안정시킬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에 이렇다 할 공동행사를 갖지 못하여 남북공동행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한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통일연구원이 연례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남북공동행사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 간에 6.15공동행사와 8.15행사 등 남북 간 공동행사가 다수 진행되었다. 남북교류와 왕래가 한창이던 2002년 6월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60.4%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안보불안은 2003년과 2004년, 2005년에 진행된 남북간 공동행사로 크게 해소되어, 2005년 7월 조사에서는 43.0%로 17.0% 포인트가 떨어졌다. 2000년대 중반에 진행된 남북 공동행사와 6자회담 등의 사건은 국민들의 북한발 불안의식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남북간에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 지원, 개성공단과 경제협력, 장관급회담과 군사대화 등의 사건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북·통일 의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었던 언론의 해석과 개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남한의 정부와 언론이 남북관계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건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사건과 달리 별다른 불안감을 촉발하지 않았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비상경계령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김정일 사망시에는 김일성 사망시와는 달리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언론에서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탓에 안정적인 보도를 하였다. 북한에 대한 불안감을 고취하는 대신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과 리설주의 파격적 등장, 장성택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북인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은 김일성 주석 사망 사건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탓인 듯 별다른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던 과거와는 달리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국민들도 남북교류의 경험과 정보에 근거하여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의식이 감소하고 협력적 관계를 희망하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과 리설주의 파격적 등장, 장성택의 중국 방문과 북중간 경제협력 등의 사건들이 '적대'에서 '경계'로 대북인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으로 또 다시 '적대'의식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사건의 범위와 역사적 의의를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북공동 행사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사건의 변수별 차등효과: 세대, 이념, 지역

1. 세대

사건효과는 세대와 이념,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세대 간에 나타나는 사건의 차등적 효과를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각 세대별로 다르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천안

함 사건으로 20대의 대북인식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대북인식이 20대에서는 61.6% → 41.9%로 19.7%포인트가 하락하였다. 20대 연령층의 대북인식이 그만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30대에서 60.8% → 49.9%로 10.9%포인트가, 40대에서 57.7% → 45.2%로 12.5%포인트가 하락한 것에 비하면 20대의 대북인식은 대단히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다.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45.2% → 42.2%로 3.0%포인트만 떨어져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북한발 무력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20대의 안보불안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구조의 단면으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가 가장 높고, 30대, 40대, 50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보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발 사건이 세대별 안보불안에 미친 효과나 영향은 20대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사건의 영향이 반영된 2009년 조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안보불안은 20대가 64.1% → 71.0%로 6.9% 높아진데 비해 30대는 51.8% → 64.8%로 13.0%가 상승했고, 40대는 48.9% → 60.0%로 11.1%, 50대 이상은 43.3% → 58.2%로 14.9%가 각각 상승하였다. 즉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불안 의식이 가장 높아졌고 30대, 40대, 20대 순으로 상승폭이 낮아, 20대가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조상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안보불안의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발 무력도발 사건에 의해 안보불안을 더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을 경험했거나 가까이에서 접했던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북한의 도발적 사건에 대해 안보불안 의식이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안함 사건으로는 20대의 안보불안외식이 71.0% → 74.6%(3.6% ↑), 30대는 64.8 → 69.6%(4.8% ↑), 40대는 60.0% → 63.3%(3.3% ↑), 50대 이상은 58.2% → 61.3%(3.1% ↑)로 나타나 천안함 사건효과외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평도 사건에서는 세대별 효과가 조금 발휘되었다. 즉 20대에서는 74.6% → 86.1%(11.5% ↑), 30대 69.6% → 77.9%(8.3% ↑), 40대 63.3% → 75.8%(12.5% ↑), 50대 이상은 61.3% → 74.9%(13.6% ↑)로 50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40대, 20대, 30대 순으로 영향이 적었다. 여기에서도 북한발 무력도발 사건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20대 젊은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념

사건이 보수·진보의 이념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보수보다는 진보의 정치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대북외식이 중도와 보수가 각각 49.9% → 44.7%, 42.7% → 37.5%로 5%씩 감소한 반면, 진보는 60.9%에서 49.4%로 11.5%나 급감했다. 금강산사건은 보수의 북한외감을 23.2% → 20.3%로 2.9% 밖에 떨어뜨리지 못했으나, 진보의 북한외감도는 32.0% → 25.1%로 6.9%나 떨어뜨렸다. 즉 금강산 사건으로 보수보다 진보의 대북외감이 더 부정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외감도도 진보 쪽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즉 진보의 미국외감도는 42.7% → 55.7%로 13.0%가 상승한 반면, 보수의 미국외감도는 59.3% → 61.6%로 2.3%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에 대해 보수의 외식을 67.9% → 66.8%로 1.1% 감소시킨 반면, 진보의 외식은 63.5% → 68.1%로 4.6%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평도 사건이 ‘통일의 필요성’에 미친 영향을 보더라도 보수는 54.8% → 55.0%로 0.2%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데 비해 진보는 67.4% → 60.3%로 7.1% 부정적 통일의식을 강화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북한발 도발사건이 보수보다는 진보의 대북인식을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강화시켰음을 증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발 사건은 이념변수의 차이를 잠식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2009.5)을 단행하기 전인 2008년 조사에서 전쟁가능성을 우려하는 진보(45.6%)와 보수(41.1%)의 의견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2009년 7월 조사에서는 전쟁가능성을 진보와 보수가 동일하게 54.5%로 답하였다. 북한발 안보불안 효과가 심대하게 작용하여 보수-진보의 전쟁불안의식을 수렴하도록 만든 것이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안보불안 의식이 진보(75.9%)와 중도(79.4%), 보수(78.7%)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전에 대체로 보수와 진보간의 차이가 평균 10% 가량 있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 역시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보수-진보 두 집단 간 안보불안의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의 진행을 보여준다.

이념집단의 차이는 특히 남한의 정권교체라는 단기적 효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정권교체의 단기적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2008년의 경우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2013년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때이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정권교체 효과만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08년에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59.7%에서 52.2%로 낮아진 것은 남북정상회담 효과가 크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결과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 이전 해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북한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보수(56.0%) > 중도(53.3%) > 진보(51.2%)의 순으로 보수세력이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

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2008년에는 진보(45.6%) > 중도(42.1%) > 보수(41.1%) 순으로 '진보'가 '보수'에 비해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바라본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발 안보불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또한 정권교체가 가져온 효과라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보수(69.8%)가 진보(67.7%)보다 안보불안을 더 강하게 느낀 반면, 2013년에는 진보(72.0%)가 보수(62.3%)보다 훨씬 안보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2007년과 2008년과 마찬가지로 보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진보는 보수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이 자칫 잘못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안보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는 보수 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교체라는 사건이 보수와 진보의 안보의식과 대북 정책 만족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의미한다. 즉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07년에는 보수세력이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로 간주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약화, 북한정권에 휘둘림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바라본 반면, 이명박 보수정부로 정권이 이양된 2008년 상황에서는 안보 면에서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진보세력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았으나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압박정책으로 북한과 군사적 마찰을 빚음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⁴⁾ 그 결과 객관적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교체라는 사건 자체가 안보불안의 이념적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4) 박명규 외,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8), 54-55쪽.

놓음으로써 통일의식을 변화시켰다.

3. 지역

북한발 사건효과는 지역별로도 다르게 작동한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에 미친 효과를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과 호남권에는 각각 51.2%→54.6%(3.4%↑), 65.1%→64.7%(0.4%↓)로 적은 영향을 미친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에는 각각 46.1%→68.7%(22.3%↑), 66.2%→57.6%(8.6%↓)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도권은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호남권과 중부권은 안보불안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조성되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핵실험에 큰 충격을 받았던 수도권은 68.7%→69.3%(0.6%↑)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핵실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중부권은 57.6%→72.0%(14.4%↑)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실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도 천안함 사건에는 54.6%→58.6%(4.0%↑), 64.7%→73.1%(8.4%↑)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평도 사건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부권에서 안보불안의식을 69.3%→83.9% (14.6%↑), 58.6%→71.2% (12.6%↑), 72.0%→80.8% (8.8%↑)로 각각 고조시켰으나, 호남권에서는 73.1%→71.6%로 1.5%를 끌어내렸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효과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수도권은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안보불안이 22.6%포인트가 높아지는 등 가장 심각한 안보불안을 경험했으며, 천안함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신 연평도 사건으로는 14.6% 포인트가 높아지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중부권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각각 14.4%포인트, 14.6%포인트씩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수도권과 중부권에 비하면 영남권과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북한발 사건에 영향을 덜 받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안보불안 의식은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호남권은 천안함 사건으로 안보불안이 8.4%포인트 고조되었고 영남권은 연평도 사건에 의해 12.6%가 높아졌지만, 수도권과 중부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덜한 안정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사건 효과는 새로운 지역분화를 재구조화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북한발 사건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역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가 진행 중이다.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 북한의 도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도권과 새 행정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를 끼고 있는 중부권이 남북관계 사건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발 무력도발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위기고조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별 분화와 재구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종합분석 및 결론

남북관계의 사건은 통일과 대북인식, 안보불안과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통일의를 변화를 변화시킨다. 핵실험과 연평도 사건, 서해사태 등 북한의 물리적 도발은 단기적으로 약 20%의 안보불안 촉발 효과를 지니며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반복으로 그 효과는 반감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의 서해사태는 안보불안을 16.2%포인트 고조시켰고, 1차 핵실험은 16.7%포인트를 증대시켰으며 수도권에서는 22.6%포인트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사건은

안보불안을 15~20%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에 상승한 안보불안은 1년 이내에 10%대로 내려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의 유고발생이나 북한의 서해도서 무력점령 등 예상치 못한 북한발 대형사건이나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앞으로도 20% 이상의 안보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효과가 감소할 것이고 1년 이내에 1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과는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이다. 반면, 금강산관광객 피격이나 연평도 사건과 같이 주민피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파급효과가 5~10%의 중범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불바다’, ‘남조선 조준타격’ 같은 북한의 구두위협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공동행사와 협력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그와 비슷한 폭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다. 즉 안도감과 협력적 분위기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11.7% 포인트 낮추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공동행사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2005년에는 안보불안의식이 17.0% 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발표만 되더라도 적어도 10%의 안보불안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한 협력사건이 실제로 진행되면 1년 이내에 15~20%의 안보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남갈등과 같은 이념과 정책 대립이 진행되면 실제 효과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협력정책과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면 적어도 안보측면에서는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효과는 세대와 이념, 지역 안에서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북한발 사건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연령층은 50대 이상으로, 20대가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르다. 안보불안 자체는 20대에 서 가장 높지만 남북관계의 사건으로 받는 영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근래에 발생한 일련의 도발사건은 20대 연령층에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은 20대 젊은층에 북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강화하였다. 이념지형에서는 이러한 도발사건이 진보의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북한발 대형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대와 이념, 지역 간 통일인식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도 진행되었다.

남북관계 사건이 안보불안인식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통일자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안보불안인식이 남북관계의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화하는 양상과는 달리 통일인식은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에 직면하여 약화되기도 하지만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여 통일인식을 강화하는 양방향으로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통일인식은 상황과 사건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큰 안보불안인식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55% 대 44%로 안정화되어 있고 사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물론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과 같이 통일인지를 5~10% 정도 감소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일인식은 4차 핵실험이나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남북관계 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안보불안, 대북인식과는 달리 통일인식은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인식형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병로. “국민통일의식 변화의 시계열적 분석,” 『한국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 통일연구소 2007년 특별심포지움(2007.10.10).
- 김병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국내정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59-84.
- 김병로 ·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2012년 상반기).
- 김재홍.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논조와 국민 여론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2003).
-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박명규 · 강원택 · 김병로 · 김병조 · 송영훈 · 장용석 · 정은미.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박명규 · 김병로 · 송영훈 · 장용석 · 정은미. 『2013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
- 박명규 · 정은미 · 김병로 · 장용석 · 최규빈 · 김병조 · 강원택 · 황정미. 『2015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 정근식 · 김병로 · 장용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Effects of Inter-Korean Events on the Conception of Unification

Kim, Phil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embers in South Korean society acquire attitudes, consciousness, and images of unification when encountering inter-Korean incidents and events such 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ttempted by North Korea, or inter-Korean agreements and family reunions performed by both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and strength of inter-Korean events over the past decade on the perceptions of unification, security anxiety and North Korea policy. Overall,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the effect of raising the security anxiety by 15 ~ 20%, its effect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it is analyzed that the effect is not exercised if similar events are repeated. On the other hand, inter-Korean joint events such as the inter-Korean summit and cooperation event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security anxiety of the people to a similar extent. Event effects also appear differentiated in generations, political beliefs, and regions. In the last 10 years, as the big events of North Korea continued, the convergence phenomenon narrowed the gap between generation, political beliefs, and regional unity. Unlike the eff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on security anxiety, the effect of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itself is limited. The reason seems that unlike the security anxiety which is unilaterally influenced by the incident of inter-Korean events, the will to

solve security anxiety is work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ed for unification.

Key words: Event Effect, Security Anxiety, Conception of Unification, Inter-Korean Event, North Korean Provocation Event, Inter-Korean Cooperation Event.

김병로 (Kim, Philo)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및 북한연구소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 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KBS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북한연구학회 차기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Two Koreas in Development*, 『공간 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공저),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다시 통일을 꿈꾸다』 등이 있다.